

정부, 지원은 커녕 족쇄 ... F1 시련의 연속

■ 전남개발공사 'F1경기장 인수' 물건너 가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
국무총리실 주재로 지난 29일 열린 관계기관 차관회의 결과를 전해들은 전남도 안팎의 분위기가 다르다. 전남도에서는 회의의 전까지만 해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내 구성지구 감정평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한데다, F1 경기장 인수를 위한 전남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는 등 시급한 지역 현안이 꼬여만 가는 상황에서 부처간 조정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주재 회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재확인하는데 그쳤고 ‘혹 떼려다 혹만 붙인 격이 됐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개발공사 경주장 인수 가능할까 = 행정안전부가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차관회의에서 내놓은 입장과 관련, 전남도 내부에서는 “경주장 인수를 포기하라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방공기업이 500억원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야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남개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기는 쉽지 않다.

행안부로서는 공사채를 발행한 뒤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의 재정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회의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얘기도 있다.

행안부가 내세운 조건은 전남개발공사가 향후 경주장 운영을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남도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물려온 국

500억 이상 공사채 발행 사실상 불가능 도의회서도 ‘조례안 제정’ 등 부정적 기류

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및 지방공기업의 방만 운영을 막기 위한 당당한 조처라는 게 행안부 입장이지만 전남도로서는 부담감이 크다.

정부 지원도 없는데다, ‘적자’를 면키 어려운 F1 대회를 위해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또다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지역민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도 있다. 카보 주주사인 SK가 ‘수익성이 없다’면서 빠져 나간 자리를 다른 민간 사업자 대신, ‘만만한’ 공기업을 끌어들여 지역민 세금을 메워나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추가 지원을

하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는 것이다.

◇도의회가 떠안을까 = 조례 제정 전이라도 전남도가 ▲조례안 통과를 약속하는 전남도의회 의원 과반수 동의 ▲10월까지 조례안을 제정하겠다는 의회의 지도부의 약속 ▲전남도의 재정지원 약속서 등을 제출하면 공사채 발행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행안부의 제안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민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도민 대표인 의원들이 섣불리 나서 동의를 내주고 약속해주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전남개발공사

의 경주장 인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부정적 기류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전남개발공사가 나선 이유는 =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4월 실시한 F1 경기장 인수에 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근거로 인수를 결정했다. 전남개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 경주장 건설을 위해 카보가 끌어들이던 PF 대출금(1980억원)을 장기 부채로 대체(차환)하면 이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이자)을 2016년까지 지원하겠다는 게 전남도가 당시 내놓았던 인수 조건이다.

이같은 인수 조건을 고려한 중간 용역 결과가 ‘사업성 없다’고 나왔음에도, 전남개발공사는 경주장을 포함한 J프로젝트 삼포지구 개발 수익 등을 내세워 1980억에 달하는 공사채를 발행, 경주장 인수 절차에 나선 것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8·30 개각 5개부처 장관급 내정자 프로필

MB 초대 대통령 실장 지낸 핵심 측근

통일장관 류우익 현 정부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캠프의 싱크 탱크인 국제전략연구원(GSD) 원장을 맡아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해 나들섬 남북공동개발, 한반도 선별트 개발 등의 밑그림을 그렸다.

지난 5월 주중 대사에서 퇴임한 뒤 북한과 나름대로 대화 채널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북 상주(61세) ▲경북 상주교 ▲서울대 교수 ▲브리태니커 세계백과사전 책임감수위원 ▲프랑스 지리학회 중신명예회원 ▲서울대 교무처장 ▲세계지리학회연합회(IGU) 사무총장 ▲대통령실장 ▲주중국 대사

박물관장·문화재청장 거쳐 문화부 수장에

문화체육 최광식 한국고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이자 현직 고려대 사학과 교수로 각종 외부 활동을 활발히 병행하는 대표적 학계 인사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임명돼 3년간 장수하고 올해 2월8일 문화재청장에 임명됐다.

문화부 장관에 임명되면 문화부 산하 기관 중 차관급 직급인 국립중앙박물관장과 문화재청장을 거쳐 문화부 수장에 오른 첫번째 인물로 기록된다.

▲서울(58) ▲중앙고 ▲고려대 사학과 ▲고려대 교수 ▲고구려연구재단 상임이사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청장

‘저축은행 사태’ 금융감독혁신위원장 맡아

보건복지 임채민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현재 국무총리실장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구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합친 지식경제부가 초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최근에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을 맡아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깔끔하고 매끄러운 일처리, 원만한 성품으로 조직 안팎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이다.

▲서울(53) ▲서울고, 서울대 사당사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경제학 석사, 경희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24회 ▲지식경제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장

가족복지 활동한 대표적 여성정책 전문가

여성가족 김금래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 정책 전문가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최고위원 특보를 지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비서실 부실장급과 선대위 여성본부장을 역임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물론 재단법인 서울여성 상임이사를 맡는 등 여성과 가족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아 왔다.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후보 비서실 부실장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 예비후보 이명박선대위 여성본부장 ▲한나라당 여성국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제18대 국회의원

경제 정책 기획, 조정 능력 뛰어난 보성출신

총리실장 임종룡 전남 보성 출신으로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청와대 경제금융 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했다. 청와대에서 금융팀장까지 겸하며 재정 정책과 금융 분야를 아울러 왔다. 경제 전반에 대한 상황판단과 정책기획, 조정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 보성(52) ▲영동고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경제학 석사) ▲재정경제원(4급) ▲금융정책국 금융정책심의관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탄력 불나

정치권 직선제 폐지론

민주 “정치 개입” 우려

과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후보 단일화 과정을 둘러싼 파장이 증폭되는 가운데 직선제 폐지 주장과 함께 직선제를 보완할 공동 등락제 도입 등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과 교육감 문제에서 불거졌듯 교육자 출신 후보들이 막대한 선거자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정당의 우호적 선거참여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직선제 폐지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

당내 세신그룹인 ‘새로운 한나라’는 30일 모임을 통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투표에 의한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 9월 중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각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재적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18대 국회 들어 한나라당의

원들 중심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안,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교육감 선임 방식을 조례로 정하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 법안이 제출됐다는 점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따른 ‘교육의 정치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면 교육에 정치가 개입하게 된다”며 “교육자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0일 취임 1주년 오찬에서 “시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공동 등락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장단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한 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허재안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회장 등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광역의원, 보좌관 둘 수 있게 해달라”

청와대 초청 받은 시도의회 의장단, 추 대통령에 건의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과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의회 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지역 발전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는 광역·기초 의원들”이라며 “지역 발전이 모여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다. 지역과 나라를 위해 사심 없이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박정화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윤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

들은 이 자리에서 약속이나 한 듯 광역의원들도 보좌관을 둘 수 있게 해달라”는 “지방의원에 대한 개인 입법보조원 제도 도입”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검토해봐야 할 대목 중 하나인데,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의장단들이 이 대통령에게 건의한 ‘입법보조원’ 제도는 시·도의원(교육의원 포함) 1인당 1인의 보조 직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의 규정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해 시·도의회 의장이 임

면한다는 내용이다.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 그랑프리’에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해외 일정도 중복되지 않으면 한번 가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찬이 끝난 뒤 광주지역 현안 문제인 ▲동북아 상품거래소 광주 설립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 ▲광주 R&D특구 육성에 대한 국비지원 등의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노블랜드 13BL(신규분양)

노블랜드 8-2BL, 노블랜드 15-1BL, 노블랜드 8-4BL

롯데마트, 호수공원, 농수산물 종합물류센터, 풍영정천

DAEBANG 대방노블랜드

기대를 넘어선 품격
우월함의 차이를 즐기십시오!

인지는 물론, 생활여건, 최고의 학교, 중대형 명품까지 - 아주 특별한 생활을 꿈꾸던 당신께 남다른 품격을 선사할 것입니다.

수완 13블럭 대방노블랜드
총 659세대 신규 분양

84㎡ 161세대 (구 34A TYPE 79세대, 구 34B TYPE 82세대) / 115㎡ 498세대 (구 42A TYPE 463세대, 구 42B TYPE 35세대)

자연 아파트 옆 근린공원, 수문일제, 풍영정천의 쾌적한 자연환경
교통 제2순환도로, 호남고속도로 이용, 특급교통의 요충지
혜택 중도금 전액 무이자, 계약 1년후 분양권 전매가능
교육 도로로 통학 가능한 최고급 시설의 신설 초·고교
쇼핑 롯데복합쇼핑몰, 롯데마트, 중심상업지구 인접

문의 1688-3800

1순위 청약접수일지 9월1일
2순위 청약접수일지 9월2일
3순위 청약접수일지 9월5일